

[종합·해설]

5+2 사업,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개원후 첫 회동

'호남 배제 및 국가균형발전 역행' 지적을 받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수정 및 보완을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정치권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평가와 수정 및 보완을 위한 방안을 조망해 본다.

◇ 광역경제권 사업 평가=우선, 경제적 낙후도를 외면하고 인구 규모와 산업집적도 등을 기준으로 계획한 광역경제권 사업은 대체 수도권의 주거 구역 완화를 위해 지방을 끌어려워 세우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국가 불균형 정책'의 종합판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 90년대 중반까지 진행했던 영남 편중 정책의 부활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영남은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경남·울산) 등 2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한 반면 광주·전남·전북은 1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었다는 것이다. 또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도 호남은 5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과거 정부에서 시작했던 계속사업인 반면 영남은 10개 선도사업 가운데 7개가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호남 죽이기'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 실력 행사 불사=이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역경제권 사업의 수정 및 보완을 오는 25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공식 안건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의 실력행사도 나서기로 했다. 당장 각 상임위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에 나서는 것은 물론 내년 예산 심의에도 연계키로 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에 나서지 않는다면 호남권과 충청권이 연대,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호남·충청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청와대 및 정부 청사 앞에서 장외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를 방문한 재일본대한민국 청년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도 프로젝트 영남 10개, 호남은 5개 불과

호남·충청 연대, 수정·보완 실력행사 나서기로

집회에 나선다는 것이다.

◇ 전망=일단 호남은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측은 이번 영수회담에 광역경제권 사업의 수정 및 보완을 공식 안건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의 내부 조율에서 공식 안건으로 합의되지 않는다 해도 회담과정에서 정세균 대표가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광역경제권 사업 문제 가 호남 배제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된다는 지적 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계획이고 수정 및 보완은 정국 운영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대야소의 상황인 점도 광역경제권 사업의 수정 및 보완 전망을 아둡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 사업은 실력행사에 나서는 민주당과 이를 외면하는 여당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추후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입력 기자 tuim@kwangju.co.kr

정의화 "호남에 직접 내려가 인재 발굴"

한나라, '영남당' 이미지 불식 호남 껴안기 본격화

한나라당이 호남 공략을 본격화할 때 세다. 호남 지역민들과 만남의 폭을 넓히면서 인재 영입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호남 껴안기' 전략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비리, 추문 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가뜩이나 팽배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구애(求愛)가 민주당 심장부인 호남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정의화(부산 중·동구) 의원은 21일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에 직접 내려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것"이라며 "당 발전 및 지방선거를 위해 호남 지역 인사 영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인사들과 만남의 폭을 넓히면서 반 한나라당 정서를 불식시키고 참신한 호남 지역 인재를 영입, '영남당'이라는 이미지를 바꾸는 한편 한나라당이 인적 구성 등 본질적 차원에서 호남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 호남에서 당시 확장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김자율기자 dok2000@

한나리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6일 이전 인재영입위원회를 열고 세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도 "당의 취약지역인 호남·충청권의 당세를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생색내기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 위원, 22개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39명이 참여하는 확대 당직자회의에서 호남 공들이기 전략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정의화 의원은 "한나라당도 과거와 달리 많이 변했고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의 손길이 여기서 멈추지 않

민주 "친노 보복 수사 해도 너무 해"

박연자 회장 출금 이어 이강철 前 수석도 사정 칼날

민주당은 22일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이 전 정권(前) 비리 혐의에 대한 대대적 수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 정부가 뚜렷한 협의도 없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흡집을 내기 위해 무차별적 저인망식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참여정부 측근 인사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받아넘기려는 듯했다.

고 대상이 계속 확대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인사들에까지 뻗어나가자 '기획사정', '보복 수사'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기류는 친노(親盧) 진영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참모였던 정상운, 홍경태씨의 건설공사 수주 외압의혹, 강원랜드 압수수색, 프라임그룹 비자금 의혹 등 일련의 과정이 참여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자 태광실업 회장이 출국금지된데

정훈시장에 대해 일정부분 지나친 대립각을 세워온 점을 인정한다"며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강의장의 이같은 화해 제스처에 무소속 의원들도 환호했다. 무소속 홍철식(금남·성북·송월·다시·문평) 부의장도 "의정보고서 파문 등과 관련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뉴민주당 플랜' 수립 본격화

○ 민주당이 수권정당 프로젝트로 정세균 대표의 경선 공약인 '뉴민주당 플랜' 수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뉴민주당 플랜은 변한 시대 정신에 맞게 당의 색깔을 바꾸고 그에 맞는 분야별 정책을 개발해 다음 대선의 전초전인 2010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22일 "내년 1월 중 당의 정체성과 철학, 가치와 비전을 담은 20~30쪽 분량의 뉴민주당 선언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 지역 산단 방문

○ 김동철(광주 광산 갑)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23일부터 이틀간 지역 산업단지를 방문해 간접회를 갖고 견의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산업단지·하남 산단·소촌농공단지·△동일철강 등을 찾아 업계 관계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대기업 남품단과 문제, 공정거래 제도 및 금융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입법·정책 활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시정철현기자 chjung@

이어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KTF 조영주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설까지 나오면서 표적수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주변 인물을 뒤졌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참여정부 시절 고속성장한 기업은 일단 모두 수사대상이라는 괴담까지 공연히 떠도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대선 때 정동영 당시 후보의 측근 중 한 사람은 최근 휴대전화 및 집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는 검찰 통보를 받기도 했다.

친노 성향의 백원우 의원은 "특정한 혐의를 갖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와 친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해당 기업이나 인사를 덮치는 식"이라며 "그럼에도 최측근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드러난 것은 없고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것만 밝혀지고 있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연합뉴스